2/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관한 시론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

권향숙

권향숙　조선족의 이동과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08년 3월 일본 조치(上智)대학 대학원 외국어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오사카 태생의 재일코리안 3세로,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원,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초빙연구원과 게이센(恵泉)여자대학 강사를 겸임하고 있다. 연구업적으로는『移動する朝鮮族』(東京: 彩流社, 2011), 村井吉敬 編『アジア学のすすめ』(東京: 弘文堂, 2011)(공저), 中国朝鮮族研究会 編『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名古屋: アジア経済文化研究所, 2006)(공저) 등이 있다.

1. 서론

1980년대 전반 중국조선족(이하 조선족)[1] 방문학자와 유학생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온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조선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본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2]에 의하면 조선족은 북쪽 아오모리(青森)에서부터 남쪽 후쿠오카(福岡)에 이르기까지 일본열도의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다. 또한 조선족의 에스닉 커뮤니티는 20세기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21세기에는 오사카를 비롯한 간사이 지방까지 확장되었다.[3] 현재 수많은 조선족들이 법률계, 의료계, 학술계, 경제계, 방송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태생의 조선족 차세대가 사회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오늘날은 조선족의 생활상도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주 상황은 유럽의 '연쇄 이민(chain migration)' 현상을 집약적으로 분석한 '4단계설'[4]에 대비시켜 보면 거의 마지막 4단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 형성된 조선족 사회는 '초국가적인 커뮤니티(transnational community)'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1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1949년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중국 동북부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소수민족의 명칭이었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 명칭을 둘러싼 동의와 비판이 현재까지도 혼재하고 있다. 즉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긍지를 가지는 이가 있는 한편 이 명칭을 거부하고 '재중코리안', '중국동포', '교포' 등의 호칭을 선호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호명의 정치'로 이야기되는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수자에 의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기타 지역의 해외 코리안들과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문제의식 혹은 생활실천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의 담론이 등장하고 있는 바, 호칭에 관한 실천적 의미는 각 당사자가 각각의 사회 속에 놓여진 지역, 계층, 세대, 젠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부여된 정치적, 사회적인 뉘앙스를 배제하면서도 그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전제하고자 한다.

2 権香淑, 『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東京: 彩流社, 2011, 133~134쪽.

3 예컨대 2012년 10월 7일에는 재일본중국조선족관서우호회가 조직하고 주최한 제3차 운동회가 열려 간사이 지방에 거주하는 수많은 조선족들이 참가했다.

4 Stephen Castle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London: Macmillan, 1993.

조선족의 초국가적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 다시 말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조선족의 실천적 논리는 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국가의 논리와는 엄연히 다르다. 국가 정책에 따라 규정되는 전자의 입장과 그들을 법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후자의 입장은 정반대의 상이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전자와 후자의 상반된 관계는 수많은 이민연구 속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의 국제노동력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세계 경제의 전개를 배경으로 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속에서 국가 차원의 담론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동하는 주체들은 '이민',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5] 등으로 타자화되면서 의미부여가 되어 왔었다.[6] 이와 같은 조류에 대해 최근들어 등장한 '월경이동론'[7]은 오랜 기간 객체화되어 온 이동자의 입장을 전제로 '장소'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이민 연구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지금까지 사람의 이동에 대해 설명해 온 기존의 세 가지 이론, 즉 '푸쉬-풀이론(push-pull theory)',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이민 시스템론(migration system)'은 조선족의 이동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1978)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는 조선족의 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내륙지역에서 연해지역으로, 국내지역에서 해외지역으로 향하는 조류가 각각 단계별, 시기별 혹은

5 '외국인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의 전개를 배경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라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문직, 기술직 분야의 외국인'과 '소위 단순노동자'가 모두 포함된다. 종종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s)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전자에 부여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인 배타성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 침해가 거론되는 상황을 경감하기 위해 때로는 후자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적 유무를 불문하고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포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로 통일할 것이다.

6 木前利秋, 「移民 · 国家 · 世界経済: 歴史的 · 理論的考察のために」, 梶田孝道 · 伊豫谷登士翁 編, 『外国人労働者論: 現状から理論へ』, 東京: 弘文堂, 1998, 29~30쪽.

7 伊豫谷登士翁 編, 『移動から場所を問う: 現代移民研究の課題』, 東京: 有信堂, 2007.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미시적 차원(micro level)에서 접근하는 푸쉬-풀이론에서는 조선족의 도시 진출이 다른 민족에 비해 현저하다는 점, 특히 조선족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단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욕구라기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음을 제시한다.[8] 역으로 종속이론은 넓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개 속에 조선족의 이동을 자리매김시키는 거시적인 차원(macro level)의 분석을 제공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발전과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대이동[9]을 설명한다.

한편 앞선 두 가지 이론을 기본전제로 하면서도 구조화된 이민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주 시스템론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차원 혹은 여러 사회 간의 불평등구조라는 거시적인 차원도 아닌 중간적인 차원(mezzo level)을 주시한다. 즉,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사회구조적 변용과 함께 사실상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시각에서 조선족의 이동을 바라본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도일하는 현상은 물론 도일 후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동하는 다방향적인 이동까지도 포괄하는 다양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점 내지 지역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람의 이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10]

현재 조선족을 초국가적인 존재로서 파악하고 분석한 연구는 1990년

8 조선족의 이동성은 이동주체의 개인적인 동기나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문화적인 특성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논의가 주로 일본의 인류학과 역사학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韓国朝鮮文化研究会 編, 『韓国と朝鮮の社会と文化』, 第7号([特集] 移動 という 視座: 空間·場所·地域をめぐって), 風響社, 2008을 참조.

9 2012년 6월 현재 한국의 조선족은 36만 8163명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5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 외국인 지역별 및 국적별 현황」(2012년 6월 말 기준), 법무부 통계 http://www.moj.go.kr(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및 『연합뉴스』(2011년 7월 4일, 5일, 6일, 7일, 8일)를 참조.

10 이주 시스템론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중국인의 이주를 다루면서, 조선족의 이주까지 다룬 연구로 田嶋淳子, 『国際移住の社会学: 東アジアのグローバル化を考える』, 東京: 明石書店, 2010을 들 수 있다.

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 이는 조선족의 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와 더불어 감행되는 사람의 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부여하는 유익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조선족은 출신국(중국)에서도 과경민족(跨境民族)으로 규정되는 이주자 집단의 제2단계 이동(twice migration)이라는 점과, 일본제국의 확대와 붕괴로 인한 구종주국으로의 이동과 환류[12]라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맥락은 한·중·일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일본 이주 1세대 조선족들의 삶 속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의 조선족이 지닌 다문화적 및 다언어적 요소와 그 활용 가능성, 한·중·일을 넘나들며 네트워크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조선족' 혹은 '글로벌 조선족'으로서의 잠재력이 주목되는 바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존 이론들이 과연 조선족의 이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온 맹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 혹은 재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이동이 국가와 기업에 의해 규제되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선족의 이동을 통틀어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사용하되, 조선족의 일본 이주 과정에 대하여 선행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환언하면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조선족의 일본행을 중심으로 일본의 조선족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살펴보는 데 착안점을

11 예컨대 박광성,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佐々木衛 編, 『越境する移動とコミュニティの再構築』, 東京: 東方書店, 2007 등을 들수 있다.

12 蘭信三 編,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東京: 不二出版, 2008.

둘 것이다.[13]

일반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논해져 왔으며,[14] 특히 외국인 노동자 수입사례 연구로 주로 외국인 집단들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 및 실태 파악이 중심적 논의를 이루어 왔다. 일본에 유입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소수집단인 조선족의 이주 상황을 통해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접근하려는 이 글은 한편으로 특이한 문제 설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특수성이 보이는 조선족의 이주가 일반적으로 포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금까지 결여되어 온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즉, 지엽적인 소수집단의 이주현상을 통해 소수자와 국민국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자 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전반에 유입되기 시작한 조선족은 일반적으로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후손[15]을 가리키는 '올드커머'와 구분해 '뉴커머'라 불렸다. 일본에서는 뉴커머의 유입과 같은 시기에 유학생 유치 계획이 제안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인 이상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의 자본주의 역사 발전에서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수입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계기로는 '조일수호조약'(1876)의 체결과 청일전쟁 후의 일본 자본

13 이 글은 필자의 연구 중 다음 두 가지 연구(권향숙, 「조선족의 도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자본의 영향」, 『미드리』 제6호, 서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과 권향숙 「일본 사회와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기초적인 분석」, 『미드리』 제7호, 서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일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14 단, 고급 인재층과 소위 '단순노동자'층의 어느 한 쪽으로만 분석이 치우치는 선행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쪽을 동시에 연구 대상화하여 분석한 연구로 守屋貴司 編著, 『日本の外国人 留学生 · 労働者と雇用問題: 労働と人材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企業経営』, 東京: 晃洋書房, 2011을 들 수 있다.

15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발효(1952년 4월 28일)와 동시에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외국인이 된 재일조선인 및 재일타이완인, 즉 조선호적령와 타이완호적령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포츠담선언의 시행(1945년 9월 2일) 전에 일본에 체류한 자와 그 후손들이 포함된다.

의 조선 진출, '제2차 한일협약'(1905)으로 인한 한국의 보호국화라는 맥락과 닿아 있으며,[16] 식민지 시기에는 '외지인'으로서 조선인 노동력이 관리 및 동원되었다.[1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한 노동력 공급자원을 가진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과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인적 폐쇄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조선인 및 재일타이완인의 존재를 특수화시켜 온 역사를 갖고 있다.[18] 이는 1980년대 이후에 마치 외국인 문제가 전후 처음 등장한 문제인 것처럼 논의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의식과 통시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조선족의 일본행과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과의 교차점을 부각시키고, 종래의 연구들이 밝혀내지 못한 문제점들의 의미를 포착해 내기 위한 가설 제시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후,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조선족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을 촉진시킨 요인을 파악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조선족의 일본행과 결부된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살필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담긴 다양한 함의를 포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론적

16 야마와키 게이조는 중국인 노동자까지도 염두에 둔 조선인 노동자 문제를 해방 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제의 틀에서 검토하여 그전까지의 통설, 즉 1910년의 한일합병 이전에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은 약간의 정치가와 유학생들이었다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타파하였다. 山脇啓造, 「「韓国併合」以前の日本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の移入問題」, 『「韓国併合」前の在日朝鮮人』, 東京: 明石書店, 1994, 81~129쪽.

17 식민지시기 '외지인'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파악한 문헌으로서 山脇啓造, 『近代日本と外国人労働者: 1890年代後半と1920年代前半における中国 · 朝鮮人労働者問題』, 東京: 明石書店, 1994가 있고, 강제노동에 대한 최신 연구로는 外村大, 『朝鮮人強制連行』, 東京: 岩波書店, 2012가 있다.

18 모리 히로마사는 일본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존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서 가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전 일본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특수성과 함께 외국인 거주자의 실태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森広正, 「(第四章)日本 資本主義の特質と外国人就業問題」, 『現代資本主義と外国人労働者』, 東京: 大月書店, 1986, 197-208쪽.

으로 조선족의 일본행에는 국가와 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필자가 진행해 온 다양한 필드워크와 조사를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19]

2. 재일조선족의 특성과 단체활동–사회적 차원에서

조선족의 일본 이주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조선족의 이동은 중국의 개혁개방(1978)과 한·중수교(1992)를 배경으로, 글로벌화로 인한 사람의 이동을 대변하듯 중국의 연해도시와 세계 각국, 각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조선족의 이동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문맥에서 소위 '뉴커머'의 유입과 중첩된다. 역사적으로 조선족의 국비유학생과 함께 방문교수와 주재원들의 일본행이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은 중·일수교(1972)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해외로 유학생 파견을 본격화[20]하면서부터다. 1984년에는 자비유학 개방정책이 채택되면서 자비유학이 가능해져 상하이나 푸젠(福建) 출신 중국인 유학생이 대폭 늘어났지만,[21] 조선족의 도일은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이 제정(1985년 11월 22일)되고 시행(1986년 2월 1일)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의 조선족 수는 많지 않았으며 거주지도 수도권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점차 자비유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집세가 저렴한 수도권 지역이나 주변의 지바(千葉)나 사이타마(埼玉)의 시립 단지(団地)에서 유학생과 그 가족들

19 현지조사 및 필드워크의 동기와 문제의식 등에 대해서는 権香淑, 『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18~66쪽을 참조.

20 손안석, 「대두하는 중국과 재일 중국인 커뮤니티의 변화」, 『일본비평』 제6호, 그린비, 2012, 86쪽.

21 이 부분과 관련된 배경과 연구분석은 田嶋淳子, 「中国系移住者の新しい社会空間形成に関する一考察 : 北京·上海·福建調査結果から」, 『淑徳大学社会学部研究紀要』 第38号, 2004, 79~93쪽을 참조.

이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차츰 커뮤니티 활동이 나타났지만 조선족의 수는 두 자리 숫자를 넘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된다.[22] 조선족의 이주 초기 국비와 자비를 불문하고 1980년대 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도일한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던 세대들이며,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태생으로 현재 40~50대 조선족은 엘리트층의 고학력 대학생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이 증가하였으나, 그들의 체류자격은 일본 정부의 엄격한 입국 관리로 인하여 주로 유학생이나 취학생이었다. 이 상황은 일본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01년도 실태조사(유효응답 120)[23] 및 2005년도 실태조사(유효응답 164)[24]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학 및 취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2001년도 현재 55%, 2005년 현재 50%로 나타났고, 이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였다. 한국에서의 조선족 사회의 형성은 주로 노동자층의 유입에 의해 이루어진 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유학이라는 이동 형태로 유입되어 대학이나 대학원(석사, 박사)을 거쳐 사회인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기까지는 한국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본 조선족의 상황과 특성은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응답자는 80%가 조선족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상적인 교육에 관한 복수응답에서는 '다문화, 다언어 교육'(51.9%)이 가장 많았다. 전체 비율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2001년도 조사에서도 2005년도와 비슷한 응답을 확

22 서론 첫머리에서 소개한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오늘날의 조선족 분포상황은 2000년 이후 다양한 조선족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관찰되는 모습들이다.

23 権香淑 · 宮島美花 · 谷川雄一郎 · 李東哲, 「在日本中国朝鮮族実態調査に関する報告」, 中国朝鮮族研究会 編, 『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 東京: アジア経済文化研究所, 2006년, 179~222쪽.

24 権香淑, 「越境する〈朝鮮族〉の生活実態と エスニック · ネットワーク: 日本の居住者を中心に」, 外国人問題研究会(代表: 田嶋淳子) 編, 『韓国系ニューカマーズからみた日本社会の諸問題』, 財団法人社会安全研究財団, 2006.

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조선족 스스로 '다문화, 다언어교육'을 이상적으로 보는 가치의식이나 다중문화적 아이덴티티, 다언어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조선족의 특성은 언어능력에 관한 자기평가의 항목에서도 나타난다. 신문보도를 통해 한국에서도 한·중·일 언어에 능통한 일본의 조선족이 소개[25]되어 왔지만 통계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국어,[26] 중국어, 일본어의 세 가지 언어에 대한 습득 상황을 물어보는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선택한 응답자는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80% 이상의 결과로 나타났다.[27] 어디까지나 응답자의 자기평가에 기초한 결과이기는 하나 5분의 4 이상의 응답자가 3개 국어를 나름 괜찮은 수준으로 구사한다고 인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 사회에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가정 내의 사용언어에 관한 항목에서는 50% 가까이(47%)가 '한국어'를 선택했다. 그 중 60%가 미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배경에는 종래의 가족관계, 즉 한 지붕 아래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의 보급과 더불어 새로운 가정 공간이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을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면 혹은 음성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거의 매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응답자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선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어를 매개로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공간의 변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부모는 한국에서 돈 벌고 형님은 상

25 예컨대 『한겨레신문』은 2012년 11월 3일자부터 8회에 걸쳐 「조선족 대이주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족 문제를 보도했고, 그 특집기사 중에서 일본 유학을 통한 엘리트 집단의 모습과 현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26 조사 당시 설문지에는 "조선어"라는 단어를 썼었고 그에 대한 응답자의 자유 회답에서는 한국말, 조선말, 연변말 등의 단어로 표현되었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국어'로 통일하였음을 밝혀둔다.

27 반대로 부정적 평가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0명 미만이라는 낮은 비율이었다.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10명 중 60%가 초과체류자임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이에서 회사 다니며 동생은 일본에서 공부한다'는 '가족 분산'[28]의 모습은 극히 일부 가족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조선족 가족에서 보여지는 일상이다.

이상에서 재일조선족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조선족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단체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012년 현재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설립 순으로 꼽는다면 옌벤대학 교직원 출신자와 졸업생들이 모이는 옌벤대학 일본교우회(전신은 1990년에 설립된 동방학우회), 조선족 연구자와 관련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조선족연구학회(전신은 1999년에 설립된 중국조선족연구회), 조선족 기업가와 기업가를 지향하는 차세대들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위한 세계한인무역협회 지바지회(2006년 설립), 직장인, 사업가,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의 축구애호가들로 구성된 조선족축구협회(2007년 설립, 10개 팀 소속), 여성과 아이들이 모여 일본 사회 적응방법이나 경험을 나누며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조선족여성회(2008년에 설립)[29]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단체로 7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조선족 사이트 '쉼터' 외 소규모의 네트워크화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선족 단체들의 이러한 활동들은 이미 수많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끝내고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일본 사회에 정착하면서 사회인으로서 활약해 가는 과정이자 현황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단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정규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업인과 여성들의 단체활동이 활발하다.[30] 해외동포 네트워크 조직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세계한인무역

28 권태환 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69~93쪽.
29 조선족여성회의 실천적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권향숙, 「조선족의 일본 이주와 에스닉 커뮤니티: 초국가화와 주변의 심화 사이의 실천」, 『역사문화연구』 제4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30 지면 관계상 단체활동에 대한 언급은 21세기에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로 한정했다.

〈그림 1〉 차세대 무역스쿨 안내장

〈그림 2〉 차세대 무역스쿨의 한 장면

협회(월드옥타)는 도쿄, 지바,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5개 지회가 있는데, 그 중 일본의 조선족으로 구성된 유일한 단체가 지바지회이다. 이 지바지회에서는 일본의 조선족이란 장점을 살려 일본, 한국, 중국이란 무대를 배경으로 무역, 건축, 부동산, 식품업, 정보통신업, 친환경, 미디어, 학술 연구, 기술 서비스, 음식업 등의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 회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취업이나 기업으로도 관심을 돌려 해마다 기업인의 성공사례와 성공모델을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차세대 무역스쿨을 기획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그림 1, 2〉).

이 지바지회의 활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족여성회이다. 일본에서의 취직, 사업, 육아 등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공유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보다 편안하고 나은 삶을 위해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 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조선족 여성들의 교류를 넓히는 마당을 꾸리기 위해 어린이 한글교실, 민족무용과 노래 배우기, 스포츠 활동,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

그러나 조선족의 이주 초기부터 활동해 온 단체들도 각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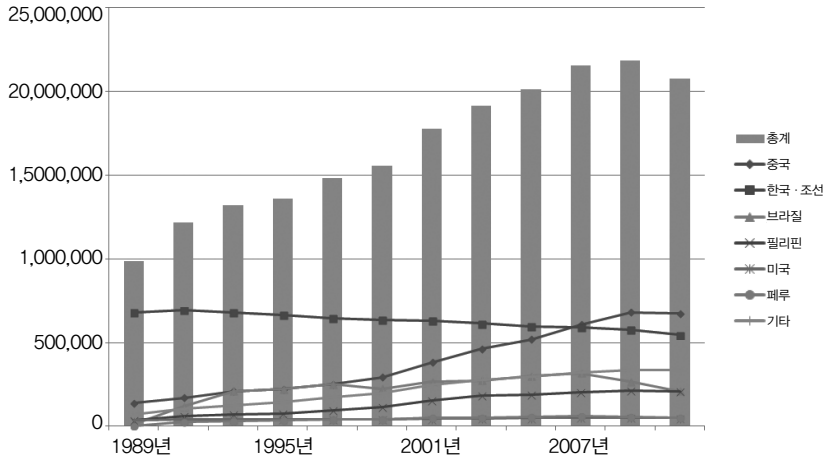
〈그림 3〉 옥타지바 송년회에서 노래하는 여성회 회원들과 아이들

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여성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익힌 노래는 조선족 단체활동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공연되기도 한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회와 새해 첫 시작인 신년회에서 아이들이 출연하는 노래 공연은 빠져서는 안될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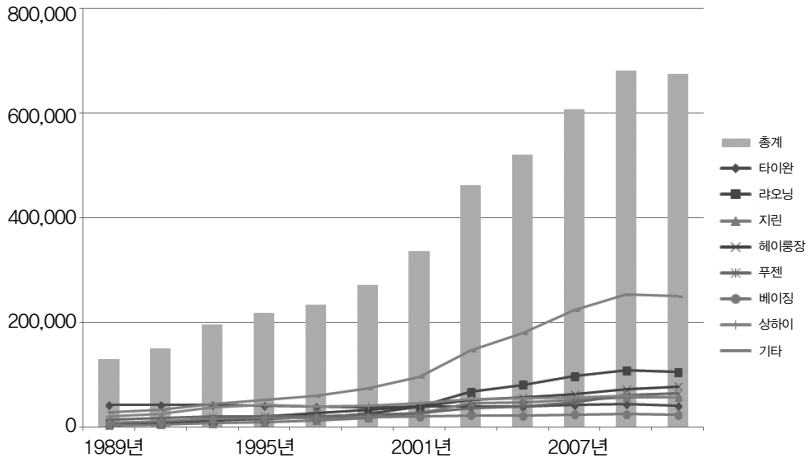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조선족의 다양한 단체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들의 존재를 일본의 공개된 통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관련자료인 '체류 외국인 국적(출신지)별 통계'(〈그림 4〉) 및 '체류 외국인 본적지별 통계'(〈그림 5〉)[31]에 의하면 2007년부터 해방 후 일본 최대 소수자집단이었던 재일코리안의 전체 수보다 재일중국인 숫자가 웃돌았다는 점, 중국 동북 3성을 출신지로 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지난 20여 년 동안 1만 5942명(1989년)에서 23만 9789명(2011년)으로 15배 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족별 구분이 없는 일본의 국적별 외국인 통계에서 조선족의 정확한 수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출신국인 중국의 공식통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여권을

31 『在留外国人統計』, 東京: 財団法人入管協会, 2011 참조.

가지고 일본행을 택하는 조선족의 정확한 통계 파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5만 명가량[32]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은 사회적으로도 일본어 한자음을 사용해 중국식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림 4〉 체류 외국인 국적(출신지)별 통계



〈그림 5〉 체류 외국인 본적지별 통계

32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일본의 아시아문화경제연구소 류경재 소장의 논문에서 인용함. 류경재,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글로벌 코리안 경제 문화 네트워크』, 중국: 민족출판사, 2008, 22쪽.

'조선족임'이 일본 사회에서 부각될 기회는 매우 적다.

한국의 외교통상부 통계를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2년 현재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재외동포 현황(〈표 1〉).에 따르면 일본에는 재외국민 57만 8135명(영주권자 46만 1627명, 일반체류자 9만 6146명, 유학생 2만 362명)과 시민권자 32만 6671명으로 총 90만 4806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 726만 8771명의 약 12.4%에 해당되는 이 숫자는 중국(270만 4994명)과 미국(217만 6998명)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어디까지나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1952~2010년까지 연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족 포함)'인 '시민권자'를 집계한 통계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재이주를 거듭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의 통계에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일본의 조선족은 '보이지 않는 소수자(invisible minority)'[33]라고 할 수 있다.[34]

33 역사적으로 일본의 '보이지 않는 소수자'로 간주되어 왔던 존재로 소위 '부락' 출신자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코리안 출신의 '귀화인'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전자나 후자할 것 없이 법제도상 평등한 국민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유명 인사들 중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해 본명을 써서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류사회 민족이나 국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소수자'를 말한다면 분명 일본의 조선족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소수자'를 규정짓는 것은 사회적 다수자의 인식과 규범이므로 젠더, 계층, 장애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논외로 하겠다.

34 여론이 반영된 신문보도 기사의 분석결과는 '보이지 않는 소수자'의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 주요 신문의 과거 20년 동안(1990~2010년)의 기사들 중 '조선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1031건(100%)의 기사 중 일본의 조선족을 주제화한 기사는 불과 12건(1.16%)에 지나지 않았다. 상세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権香淑, 「「見えない朝鮮族」から読み取るエスニシティ論の地平: 日本の新聞報道を手掛かりに」, 『在日朝鮮人 / 在韓中国朝鮮族社会における親密圏 · 公共圏の変容』, 京都: 京都大学 GCOE Working Papers, 2011. 혹은 松田素二 · 鄭根植 編『コリアン · ディアスポラの経験と現在』, 京都: 京都大学出版会(未刊)를 참조. 물론 조선족이 일본의 외국인 중에서도 소수자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소수자'라는 명제는 단순히 국적을 중시하는 법적 관점에서 연유될 뿐만 아니라, '단일 민족신화'가 뿌리깊고 동질성이 짙은 일본 사회 풍토의 반영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재외동포수 국가별 총계 (단위: 명)

국가명	재외국민	시민권자	총계
중국	369,026	2,335,968	2,704,994
미국	1,082,708	1,094,290	2,176,998
일본	578,135	326,671	904,806
캐나다	128,826	102,666	231,492
러시아	5,936	213,020	218,956
우즈베키스탄	2,300	171,300	173,600
카자흐스탄	1,895	105,235	107,130
영국	42,990	3,839	46,829
독일	23,704	7,814	31,518
키르키즈스탄	931	17,299	18,230

* 재외동포 국가별 상위 10순까지의 총계 (2011년)
*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 및 현황」(http://www.mofat.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enu=m_10_40) 참조 필자 재구성

3.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정책적 차원에서

앞서 살펴본 조선족의 유입은 과연 일본의 어떤 정책 하에서 이루어져 왔는가? 조선족의 도일이 시작된 1980년대 일본은 국제이민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주된 요인으로 소위 '보트피플'로 알려진 인도차이나 난민의 이슈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압력으로 일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1951)에 가입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서명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령'(1951)의 개정에 이어 1982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른바 '1982년 체제'가 시작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이 시기 유흥업비자로 입국하는 아시아 여성, 1972년 중 · 일수교 이후 귀국하기 시작한 중국 잔류고아, 유럽이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파견된 비지니스맨 등 뉴커머의 유입과 더불어 버블경제 하 단순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합법 노동자도 연이어 일본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초기 조선족 유학생의 도일 시기는 '1982년 체제' 하에 실시된 '유학생 10만 명 계획'(이하 '10만 명 계획')과 중첩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내각이 제안하고 실시한 이 계획은 1983년의 '21세기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과 1984년의 '21세기 유학생 정책의 전개에 관하여'라는 문부성(현 문부과학성) 유식자회(有識者会)의 보고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정해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실시된 직후 법무성은 대학 입학에 앞서 일본어 교육기간에 재적하는 취학생에게도 입국절차의 간소화를 실시(4절에서 후술)했고, 자격 외 활동인 아르바이트의 규정도 완화했다.[35] 그 결과 취학생수는 1983년 당시 약 3500명에서 1988년에는 10배에 이르는 3만 5000명으로 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이 중국 국적의 취학생 속에 조선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10만 명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10만 명 계획'은 나카소네 수상의 동남아 방문 결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5월 아세안(ASEAN) 각국을 방문했을 때, 1943년 내지 1944년에 '남방특별유학생(南方特別留学生)'[36]으로 파견된 일본 유학 경험자들이 자식들을 유학 보낸다면 일본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낼 거라는 의향을 나카소네 수상에게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유학생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려져 있다.[37] 당시 세토야마 미쓰오(瀬戸山三男) 문

35 1983년 6월, 유학생 신분으로 주 20시간까지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면서 취학생도 같은 조건으로 취업과 노동이 가능해졌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정에 대해서는 法務省入国管理通知,「大学等高等教育機関で勉学する外国人留学生のアルバイトに関する出入国管理行政上の取り扱いについて」; 栖原暁,「日本の留学生政策」, 駒井洋 編『国際化のなかの移民政策の課題』, 東京: 明石書店, 2003, 203쪽을 참조. 취학생과 관련해서는 法務省入国管理局就学生受入れ問題懇談会,『日本語就学生の受入れの在り方: 入国 · 在留の問題点と課題』, 東京: 入管協会, 1994를 참조.

36 정식 명칭은 '남방문화공작특별지도자의 교육육성사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4절에서 언급할 것임.

37 하지만 단순히 나카소네 수상의 심층적, 정서적인 경험이 '10만 명 계획'의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표면적인 설명이고, 당시 세계 각국과의 경제마찰의 격화 때문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의 필요성과 요구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설명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武田里子,「日本の留学生政策の歴史的推移: 対外援助から地球市民形成へ」,『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第7号, 東京: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 2006, 84쪽.

부대신 아래 5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제언이 작성되었고, '10만 명'이란 목표 수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 외무대신이자 초대 국제대학 학장인 오키타 사부로(大来佐武郎)였다.

1980년대 일본이 경험한 국제이민의 전환기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출입국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을 촉진시켰다. 1989년 12월에 공포되고 1990년 6월에 시행된 '개정출입국관리법'(이하 '개정입관법')은 첫째,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류 자격의 부여, 둘째, 비자 신청 수속의 간소화, 셋째, 비합법 노동자의 고용자 및 중개업자에 대한 형벌규정의 세 가지를 주로 개정하였다. 즉, 전문직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미숙련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 '개정입관법'이 도일하는 조선족 유학생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유학생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수료한 다음 체류자격을 '유학'에서 '기술'이나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으로 변경하여 일본에서 비지니스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사실 조선족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학업을 끝낸 다음 일본 기업에 취직하여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자신이 기업을 하여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 유학생의 경우 일본의 일류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후 독립하거나 대학교수가 된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조건을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자 토대가 '개정입관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고려하면 1980년대 전반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일본행의 선두에 선 조선족들은 교육수준이나 전문적인 능력 등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풍부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조선족의 도일은 어디까지나 특정 사회층에 제한된 소규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개정입관법'의 시행은 특정 사회계층의 소규모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조선족이 유학이나 취학을 목적으로 도일하려면 '비용의 벽'과 '제

도의 벽'이란 두 가지 큰 장벽을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국제관계나 제반 제도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조선족의 도일을 규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완화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요인의 하나는 조선족의 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에 한·중수교로 인한 국제관계의 변화(간접적 요인)[38]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신원보증인 제도의 폐지(직접적인 요인)로 인한 조선족 사회 변용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신원보증인제도란 일본에 유학, 취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이 신원보증을 한다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일 과정에서 유학생이 일본인 신원보증인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고,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해 유학을 단념하거나, 중개업자가 신원보증인의 알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건의되어 왔었다. 1996년 12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39]의 개정에 따라 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신청서류의 간소화가 실현되었고, 비자 신청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조선족 도일의 가속화, 대규모화가 촉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행을 희망하는 조선족은 일본에 체류하는 지인이나 친구, 가족, 친척 등 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조선족은 취학생,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입관법'이 시행된지 단 1년만에 버블경제가 붕괴되었다. 장기적인 불황의 시작으로 노동시장이 축소되긴 하였으나, 뉴커머의 유입 수가 급속히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앞서 설명한 미숙련 노동자를 제한하는 규제 강화를 모색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그들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38 한·중국교 수립으로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김으로 인하여 냉전시기에 분단되고 단절되었던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부모세대가 한국에서 막벌이 노동을 한 돈으로 아들딸들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 『한겨레신문』은 이 상황을 특집기사로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족 약전' 엘리트들, 한국 취업 생각 않는다」, 2011년 11월 18일,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181.html(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39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56年法務省令第54号), http://www.moj.go.jp/content/000055034.pdf(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비공식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연습생', '취학생', '일계(브라질, 페루)인'의 세 가지 유입 경로가 이에 해당하며, 조선족은 주로 '취학생' 경로를 거쳐 비합법적인 미숙련 노동자로 잔류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취학생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다는 수도권의 어느 일본어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1997년 이후 중국 국적의 취학생이 정원 수 400명의 약 80%를 차지하였고, 그 중 약 80%가 조선족인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다'고 했다. 또한 어느 유학 중개업자는 '가장 많을 경우 1회 입학 시 100명 가량의 조선족을 일본어학교에 입학시킨 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조선족은 초기 유학생 신분으로 도일하여 일본에 정착한 집단으로, 노동력 유입으로 비교적 빠르게 한국 사회 속에서 가시화된 재한조선족 사회와는 분명히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제도적 및 사회적 구조상 전혀 가시화가 안된 미숙련 노동자 집단에 국한해서는 한국의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지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관찰된다. 수도권 어떤 지역의 한국인 이주자가 민가를 개조하여 운영하는 가방공장에서는 조선족의 소위 불법 · 잔류 미숙련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씩 장시간 일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40]

'IT혁명'과 더불어 2000년에 '출입국관리기본계획(제2차)'에서 제시된 단기체류 전문직의 체류기한 확대 방침[41]은 유학 및 취학생 중심이었던 조선족의 이동 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개정입관법'의 시행으로 외국인 전문직에 한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전문 기술자 또는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이 일본 유학을 거친 다음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입과 동시에 일본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

40 権香淑, 『移動する朝鮮族』, 188~198쪽.

41 「出入国管理基本計画(第2次)」, http://www.moj.go.jp/PRESS/000300-2/000300-2-2.html(검색일: 2012년 12월 23일)에서 인용함.

작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인재 확보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그에 따른 형식적인 방침을 마지못해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42]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전문직의 유입 확대 방침과 실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적용은 주로 조선족 IT전문직의 유입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기술' 및 '기업 내 전근' 등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중국인 안에 조선족 시스템 엔지니어(SE)를 비롯한 기술자가 일정 비율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IT관련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직접 인재를 모집할 경우, 선발기준으로 우수한 IT관련 기량은 물론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팀워크의 능력도 엄격히 요구되었다는[43]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조선족이 치열한 채용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일본의 IT관련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후 독립하여 비지니스를 전개하는 조선족 기업가도 상당수 존재한다. 최근 들어 이들을 포함한 조선족 기업인들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트'를 형성해 가고 있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보이지 않는 소수자'에 담겨진 함의: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앞서 살펴 보았듯이 조선족의 도일 현상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및 관련 분야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은 서두에서 언급한 이민 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세 가지 이론적 범위를 통해서도 보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이론적 범위

42 王津, 「日本の外国人高度人材導入政策と在日中国人: 中国人IT技術者に対する実態調査を中心に」, 『中国系移住者から見た日本社会の諸問題』, 財団法人 社会安全研究財団, 2005, 94쪽.
43 王津, 「日本の外国人高度人材導入政策と在日中国人」, 80쪽.

는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44]을 면치 못할 것이며, 조선족의 이주과정 역시 그 비판을 염두에 두고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의 도일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과의 교차점은 어디에 있으며, 그 지점에서 국가와 기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한 그 과정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을 고찰하려면 정책과 제도의 배경,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무처리 과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족 초기 유학생들의 이주 배경으로 된 '10만 명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유학생 및 취학생의 입국수속 간소화가 실시된 지 1년째 되던 1984년 10월, '입국사전심사종료증제도'라고 불리는 수속절차가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비자 발급은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비자 신청서가 재외공관에 제출된 다음 외무성을 경유하여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서류가 재외공관으로 회부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어학원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어학원에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어학원이 외국인 신청자의 신원보증인이 됨으로써 유학생 및 취학생의 유입이 가능해졌고, 이는 유학생이나 취학생에게 있어서도 도일의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45] 사실 이 조치가 도입된 이후 유학생의 유입 상황은 약 10년 동안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46]

유학생 및 취학생의 비자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권이 없는 조선족에 대해 입국 적합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조치

44 樽本英樹, 『よくわかる国際社会学』,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2009, 59쪽.
45 明石純一, 『入国管理政策: 「1990年体制」の成立と展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10, 85쪽.
46 明石純一, 『入国管理政策」の成立と展開』, 171쪽.

를 취해왔다고 한다.[47]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로 입국했던 초기 조선족 유학생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여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1972년에 수교를 맺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간 법적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외교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행정입법 과정, 즉 입법취지와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이며 국회회의록도 없는데다 '10만 명 계획'에 대한 사무처리 대응이란 측면도 혼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실증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개정입관법'이 실시된 지 10년이 더 넘는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조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만약 상기한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근거, 다시 말해 외국인인 조선족에게 그런 조치가 취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관계자는 그 이유를 1942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시, 점령 지역의 통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대동아성(大東亜省)[48]의 장학생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수많은 '만주국'의 학생들이 대동아성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북3성에 사는 조선족들은 그 당시 '일본 덕택으로 유학하여 공부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선인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 '일본인'과 거의 다름없었고, 따라서 중국의 여권 없이 조선족의 체류자격을 인정할 권리가 일본에는 당연히 있다는 무의식이 이러한 사무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49]

대동아성은 나카소네 수상이 '10만 명 계획'을 창안한 계기가 된 '남

47 2001년 7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한 일본의 조선족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도쿄 요쓰야(8월)와 신주쿠(11월) 에서 진행한 인터뷰 기록을 참조함.

48 「大東亜省設置ニ関スル件」, http://rnavi.ndl.go.jp/politics/entry/bib00415.php(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49 일본 정부 관하 관료들의 사무처리 과정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글에서는 문제 접근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분석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삼을 것이다.

방특별유학생'을 육성한 부서가 설치된 기관이기도 하다. '남방특별유학생'은 일본(육해군)의 경비 부담으로 각 지역의 점령군정 당국에 의해 '남방제국의 중견지도자'로 선발되어 일본어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유학했던 자들이다.[50] 관계자가 말하는 대동아성의 장학금 제도가 이 '남방특별유학생' 제도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면, 1942~43년 당시 일본이 아시아 점령 지역에서 행해왔던 일련의 국가적인 행위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유학생을 유입하는 사무처리 과정에서도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대동아성의 장학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없는 현 상황[51]에서는 향후의 구체적인 논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전쟁 전의 국가적인 논리가 부정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연속성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52]

'조선족의 후손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담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례는 또 다른 문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정황 인식에 있어서 연구자와 실무담당자 사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경향, 즉 "영주권을 갖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전에는 일본 국적을 가졌거나 혹은 그 후손이므로 이들 영주자를 일본인과 아예 구별해 오지 않았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추계에 영주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실을 '관례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우이다.[5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는 기본적으로

50 江上芳郎, 『南方特別留学生招聘事業の研究』, 東京: 龍溪書舎, 1997.

51 유학생사 연구사에서는 1937년 이후의 공백이 지적되어 있음. 河路由佳 他, 『戦時体制下の農業教育中国人留学生』, 東京: 農林統計協会, 2003 혹은 大里浩秋 · 孫安石 編, 『中国人日本留学史研究の現段階』, 東京: 御茶の水書房, 2002를 참조. 대일협력정권의 연구들 중 특히 화북지역의 연구축적이 적은 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에서 언급되어 있음. 川島真, 「日本占領期華北における留日学生をめぐる動向」, 『中国研究月報』, 第61巻 8号, 東京: 中国研究所, 2007, 4~18쪽.

52 이 연속성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과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 국가정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근본적인 재고를 제기하는 관련 서적으로 孫崎亨, 『戦後史の正体: 1945-2012』, 創元社, 2012을 들 수 있다.

53 井口泰, 『外国人労働者新時代』, 東京: 筑摩書房, 2001, 51~52쪽. 이와 비슷한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단, 다음 보고서는 일본의 외국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틀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조선족 유학생이 일본을 유학지역으로 선택한 동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중·일수교 이후 중국으로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일본 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이 일본 유학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일본 기업의 베이징 지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일본에 대한 관심을 돋우어' 유학길에 올랐다는 동기를 이야기하는 조선족이 적지 않다. 또한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으므로 '일본을 외국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경험이 일본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했다는 경우도 있다.[54]

일본행 유학 붐과 함께 일본 기업이나 일본의 조선족 기업의 IT 분야의 엔지니어 모집에 조선족들이 빠른 속도로 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조선족은 한·중·일 다국어에 능통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어떤 민족보다도 언어적 우위성을 가진다. 한·중·일 언어에다 영어를 더한 네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기업가층이 매우 두텁다. 이러한 장점은 조선족의 취업 시에 여실히 발휘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일본의 조선족을 찾아서 고용하는 일본, 한국 등의 기업도 있는데, 이들 중에는 동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다국적 기업도 있다(〈그림 6〉). 언어적 우위성은 일본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촉진시키는 양방향 이동[55]을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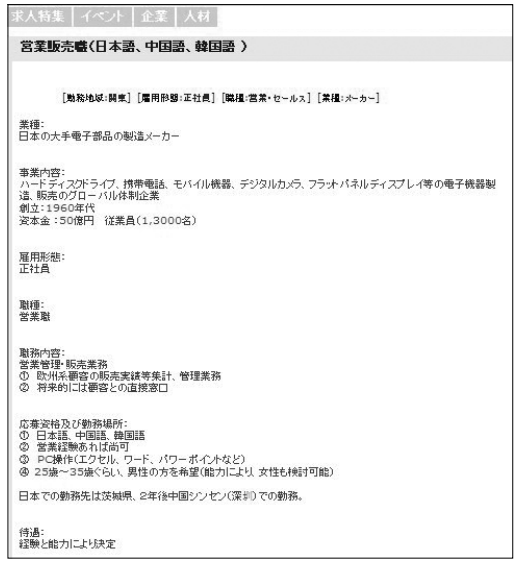
아울러 일정 기간 일본회사에서 근무경력을 쌓은 후, 스스로 기업을

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opinion/hr_res/data/sympo_keynote_report041007.pdf(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54 権香淑,『移動する朝鮮族』, 177쪽.

55 平野健一郎,「アジア・マイグレーション研究の意義」,『現代アジア学の創生第一回共同研究大会報告書』, 早稲田大学21世紀COE プログラム実行委員会, 2004, 1~10쪽.

설립하고 빠른 속도로 일본 사회에 진출하는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IT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일본에 온 지 10년도 채 안된 기간에 일본과 중국에 본사와 지사를 합하여 총 100여 명이 되는 직원을 거느리는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례도 있다.[57] 또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그룹화를 시작하여 일본 국내의 유력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선족 중견 기업도 있다. 초기투자 자본 3~10만 달러로 시작한 기업이 현재는 매출이 약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중국이나 구미지역으로 진출하는 해외 기업도 존재한다.[58] 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조선족 기업가들의 동향은 말 그대로 보다 넓은 지역과 공간을 다스리는 '동아시아의 조선족' 또는 '글로벌 조선족'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求人特集 | イベント | 企業 | 人材

営業販売職（日本語、中国語、韓国語 ）

[勤務地域:関東] [雇用形態:正社員] [職種:営業・セールス] [業種:メーカー]

業種:
日本の大手電子部品の製造メーカー

事業内容:
ハードディスクドライブ、携帯電話、モバイル機器、デジタルカメラ、フラットパネルディスプレイ等の電子機器製造、販売のグローバル体制企業
創立:1960年代
資本金：50億円　従業員(1,3000名)

雇用形態:
正社員

職種:
営業職

職務内容:
営業管理・販売業務
① 欧州系顧客の販売実績等集計、管理業務
② 将来的には顧客との直接窓口

応募資格及び勤務場所:
① 日本語、中国語、韓国語
② 営業経験あれば尚可
③ PC操作(エクセル、ワード、パワーポイントなど)
④ 25歳～35歳ぐらい、男性の方を希望(能力により、女性も検討可能)

日本での勤務先は茨城県、2年後中国シンセン(深圳)での勤務。

待遇:
経験と能力により決定

〈그림 6〉 한 · 중 · 일 세 가지 언어가 가능한 인재를 모집하는 기업 광고[56]

56 http://china.alaworld.com/modules.php?name=Jobs&op=viewinfo&id_ads=35762(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57 「일본서 만난 조선족의 대표 엘리트들(1): 재일조선족 IT업계 선두주자-김룡해」, 『흑룡강신문』, 2006년 3월 15일 기사. http://hljfb.dbw.cn/2006-03-15/00007521.htm(검색일: 2012년12월23일)

58 류경재,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문화적 네트워크」, 『2011 World-OKTA 한중경제포럼』, 서울: 세계한인무역협회, 2011, 69쪽.

5.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글에서는 일본에 있는 조선족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들을 '보이지 않는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1980년대 전반부터 진행된 일본으로의 이주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과 관련시켜 고찰했으며, 거기에 담긴 함의를 살펴보았다. '보이지 않는 소수자'의 도일 과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다시 말하면 '10만 명 계획'의 실시, '개정입관법'의 시행, 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 등 일련의 정책의 실시와 그에 따른 취학생, 비합법적 외국인들의 유입 및 전문직, 기술 분야의 외국인 수입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민 연구 이론들이 지금까지 포착하지 못해 왔던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있었다는 가설을 결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인적 자본을 형성한 초기 유학생의 도일 배경에는 '올드커머'와 비슷한 맥락에서 '뉴커머'에 대처하는 국가적인 작위성의 단서를 읽을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오래 전에 이주한 '올드커머'든 최근에 이동한 '뉴커머'든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식민지 체제 하의 조선인 또는 그 후손'이라는 타자화된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1세기에 들어 현저한 기업의 역할, 즉 조선족 기술자를 고급 인재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모습은 글로벌화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대응하려는 기업의 피나는 노력 속에서도 확인된다. 전자가 배제, 후자가 포섭의 논리라면 조선족의 도일은 이 두 가지 논리가 엉킨 국가와 기업의 공범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되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일본의 후쿠다(福田) 내각이 2008년에 발표한 '유학생 30만 명 계획'은 유학생을 2020년까지 14만 명(2008년 당시)에서 30만 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IMF가 일본 정부에 제시

한 최신 보고서[59]에는 일본이 외국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 국내 여성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만 하더라도 침체된 경제상황을 성장경제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라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 역시 전면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1990년대 '개정입관법'의 시행 이후 일본이 견지해 온 '고급 인재의 적극적 수입, 단순노동자 극력 제한'의 원칙적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제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향후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행 정책은 크게 변경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일본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된 지 오래다. 조선족의 단체활동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조선족들은 일본 정부의 국가 전략과는 상관없이 초국가적 커뮤니티를 구성하면서 일본에 정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로 더 넓게는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60] 또한 이러한 조선족의 국내외의 활동과 더불어 관찰되는 조선족의 네트워크화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대동아성 장학제도'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사실 확인,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의 해석 등은 조선족의 이주를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올드커머와 뉴커머, 재일코리안과 한국인, 한인 디아스포라와 일본의 관계성 등을 재조명하고 재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이 향후 본 연구의 실증적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59 Finance & Development, October 2012, Vol. 49 No. 3 "Can Women Save Japan (and Asia Too)?"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2/09/steinberg.htm(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60 일본의 조선족 기업인은 화교의 신분, 한국 혈통의 민족, 일본에서의 생활 경험, 그리고 북한과의 인맥 등으로 하여 한반도 남과 북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존재이며 실제로 각국, 각 지역의 법률계, 금융계, 정치계 등의 관계망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양근, 「일본조선족 기업인의 현황과 관계망」, 『2011 World-OKTA 한중경제포럼』, 세계한인무역협회, 2011, 47~49쪽.

국문초록

특집 |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 · 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 신기영

투고일자: 2012. 11. 22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2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마이너리티의 비본질적 개념과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마이너리티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규범과 일본적 특수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문에서는 정치학과 페미니즘 이론 분야의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마이너리티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의 사회집단과 구조적 억압문제,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 이론들과 관심을 공유하면서도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으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마이너리티 연구에 교차성 개념이 시사하는 중요한 함의는 첫째, 마이너리티 집단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체성 카테고리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집단 내부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는 점, 둘째, 마이너리티 집단의 피지배자성, 즉 다수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사회변혁의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정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마이너리티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을 제시한다.

주제어: 마이너리티, 정체성, 교차성, 사회집단, 복합차별론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관한 시론: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 | 권향숙

투고일자: 2012.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2.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조선족의 일본행을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 담긴 다양한 함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본에 있는 조선족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조선족을 '보이지 않는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1980년대 전반부터 진행된 일본으로의 이주를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관련시켜 고찰하며 셋째, 그 배경에 담긴 함의를 좇는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도일과정은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다시 말해 '유학생 10만 명 계획'의 실시, '개정 입국관리법'의 시행, 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 등 일련의 정책과 그에 따른 취학생 및 비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전문직, 기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이민 연구 이론들이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주제어: 일본의 조선족, 보이지 않는 소수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이동

영문초록 Abstract

Minorities in Japan

Toward Non-Essential and Inclusive Research on Minority | SHIN Ki Young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non-essential concepts and an inclusive methodology for minority research.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minority' as there have been in Japan and worldwide.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recent feminist theories on structural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of minority social groups, as offered by Iris Young, Chizuko Ueno, and by Black feminist theorists. In doing so, this article discusses how Young's concepts of 'social group' and 'structural oppression', and Ueno's concept of 'complex discrimination' can help us perceive minority groups as non-essential social groups, historically constructed vis-à-vis the dominant 'majority' of their society. This study finds particularly useful the Intersectionality approach originally employed by Black feminists. This is because the Intersectionality approach can serve as a tool for analyzing the complex identity formation of the minority, as well as their structural subordination to the majority by highlighting the mutually constitutive relations among different social identities fostered by their structural positions and socially meaningful categories such as nation, ethnicity, gender, or class.

• **Keywords:** Minority, Identity, Intersectionality, Social Group, Complex Discrimination

A Study on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Japan as a Nation-State and Enterprises for Accepting Foreign Nationals | KWON Hyang Suk

This paper locates the problem of the Joseon-jok (the so-called Korean-Chinese)'s immigration to Japan in the context of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thereof. Firstly, it roughly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the Joseon-jok living in Japan, defining them as the 'Invisible Minorities.' Secondly, it considers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which started in the early 1980s in association with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Lastly, it looks into the policies that worked in the background.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is deeply tied to the Japanese legal system and its policies involving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This means that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new set of policies of

the time, including the execution of 'the 100,000 international student' plan, the enforcement of the 'Revision Immigration Control Law,' the abolition of the personal reference system, and other policies related to the inflow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illegal foreign workers, including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either professional or technical fields. For now,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oles of the nation-state and corporate enterprises, which have not yet been thought of as a factor in the theories of immigrant studies, were important in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 **Keywords:** Joseon-jok living in Japan, invisible minority,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workers, migration

Koreans of the Jeju Origin Living in Japan: As Represented in the Post-war Japanese Television Media | YANG In Sil

In recent years, the term "Koreans in Japan from Jeju (*zainichi jejujin*)" has grown popular in the academia of both Japan and South Korea. Also, a number of TV dramas and documentaries on Koreans from Jeju living in Japan have been aired over the last few years, led by local broadcasting stations in the Jeju Island and in Osaka. These TV dramas and documentaries often take up themes such as the Jeju people' smuggling themselves into Japan, their illegal residence in Japan, their attempt to apply for the refugee status; at the same time, they also deal with themes such as romance with other foreign residents in Japan, or life in the Ikuno community in Osaka (where Koreans from Jeju are concentrated in), which symbolically speaks for this group. In fact, these same themes can be found in the television documentaries made around 1965, the period when the number of illegal migration from South Korea to Japan was rapidly increasing. In this study, I discuss how these television programs have represented Koreans from Jeju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different time periods, by observing how each media depicted the Jeju 4.3 Massacre, the Jeju people's smuggling themselves into Japan, and their nostalgia for their homeland Jeju, which reveals to be different from their fellow Koreans living in Japan from different parts of Korea. These are recurring themes in the visual media where Koreans of the Jeju-origin living in Japan appear. For instance, the television texts of the 1960s use Koreans from Jeju living in Japan as subjects of heart-warming story based on familial love, while emphasizing their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of having crossed over to Japan after surviving the Jeju 4.3 Massacre and the Korean War, their life as illegal residents, and their feelings of regret for having made the "wrong choice" of becoming illegal residents as ex-patriots. Although recent documentaries about the first generation Korean women from Jeju present their lives as full of twists and turns, such historical contexts are often deleted when adapted to the screen. In cases where Koreans of the third or fourth immigrant generations play central characters, politics becomes their main concern, and memories possessed by the first and second immigrant generations smuggling themselves into Japan from Jeju become a lynchpin that connects them to their